여야 '입법전쟁' 돌입…비선 논란·사자방 국조 변수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는 계획이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을 법정시한 내 통과시킨 여야가 이제부터 법안 처리를 놓고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외교통일 위·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와 법안소위를 열어 일제히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많은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안행위는 법안소위에서 누리 과정(3~5 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 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을 심의했으며, 정무위는 제대군인지원 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

관 법률안을 다뤘다.

여야 모두 의욕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하 고 있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10일께부터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려 160건에 달하는 주요 법안을 선별 처리할

특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 동산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

법사위 등 8개 상임위 일제히 법안 심사 착수 9일 정기국회 종료…12월 임시국회 소집 유력

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 공기업 개혁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 개 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 이 산적해 있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문제 와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 여러 현 안이 많다. 적절히 대책을 세워 올해 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야당과 협 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경제 관련 법안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연금 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 을 반영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 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간병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 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입법 추진한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논의키로 여야가 합의한 '사자방'(4 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관철에 진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새정치연합은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간 권 력 다툼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서도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 등을 요 구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 의에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 령의 상황인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며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을 루머라고 하고 유출된 문건 보도는 문제라는 인식은 대통령의 심각한 불통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자방 국조에 대한 결론 없이 연말을 보 낼수없다"고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산국회 마무리…새정치, 전대 모드 전환

경선 룰 신경전 속 문재인·김부겸 출마 관심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새정치민주 연합의 분위기가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되 고 있다. 당장 지도부 경선 룰을 두고 각 당 권 주자 진영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당권 출마를 놓고 좀 더 고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오는 8 일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경선 룰을 마련하면 비대위원직 사퇴 여부를 결 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에 결

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당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는 주변의 요구가 많은데다 가장 강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문 의원이 출마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반영하듯, 문 의원은 지난 주에 이 어 다음 주에도 광주를 방문, 호남 민심 투 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권과 대권 모두 취하려는 행 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비주류 진영에 서 '친노 독식론'을 토대로 강력 반발하는 등 당내의 분열과 내홍이 이어질 가능성 이 크다는 점이 부담이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당권을 향한 발걸음 을 재촉하고 있다. 전날 전주를 방문해 간 담회를 가진 박 비대위원은 이날도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을 찾아 특강을 하며 지지 세를 확장해가고 있다. 박 비대위원은 정 권 창출을 위한 역할론과 진정성을 강조하 는 한편 당내 비주류 진영과 범친노 의원 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의원도 자신의 강점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당원들과의 접촉을 넓혀가고 있

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아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전 의원의 출마 여 부가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달 중순만 해도 불출 마로 방향을 잡는 듯 했지만 최근 출마 가 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출마할 경우, '비 노 주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데다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의 전폭적인 지원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은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불출마를 할 경 우, 김 전 의원이 친노와 중도 진영의 측면 지원을 받아 당권 경쟁에 나서는 것 아니 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정의화, '인성운동 세미나' 성황리 마쳐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한 '인성 운동 세미나'가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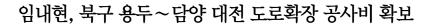
'위기의 한국사회, 인성에서 길을 찾 는다'는 주제로 이뤄진 이날 세미나에서 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등 우리 사회의 가치 분열 현상의 원인이 집중 조명됐다. 또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 기 위한 인성회복운동과 이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됐 다.

세미나를 주최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충효(忠孝)와 인의예지(仁義禮智)에 바

탕 한 우리 전통의 인 성이 무너져가고 있 다"며 "대한민국이 21세기 문명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의 아름다 운 인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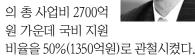
정 의장은 지난해 2월 '국회인성교육 실천포럼'을 창립해 상임대표로 활동해 왔으며, 올해 5월에는 여야 동료의원 101명과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안'을 대 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북구 을)이 광주시의 최대 교통 체증 지역으 로 꼽혀왔던 북구 용두동과 담양군 대전 면을 잇는 도로 확장 공사 예산을 확보 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던 호남 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 발주와 함께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성사 시키는 저력을 보였다.

우선 용두동~대전면 구간의 경우, 그 동안 광주 접경 구간(3km)에 대해 기획 비 지원이 미뤄져 왔으나 임 의원이 정 부 측을 설득한 끝에 국고 예산 반영에 성공,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 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지지부진했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도 임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확 보한 국고 예산에 대한 기재부와 광주시 의 분담 협의가 완 료, 이달 내에 설계 용역을 발주한다. 특 히, 임 의원은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 의 총 사업비 2700억



이번 설계용역 발주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10.8km 6차선 확장(일부 구간 8차선)과 용봉 IC 입체 화, 비엔날레 구간 개선, 노후화 구간 개 량 등이 이뤄지면서 주민 교통 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광주시의 숙원 사업을 해 결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 로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조기 개 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윤회씨 野, '국정농단' 특검 요구 등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 국회 차원의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재차 촉구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정세균 비대위원, 문 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박지원 비대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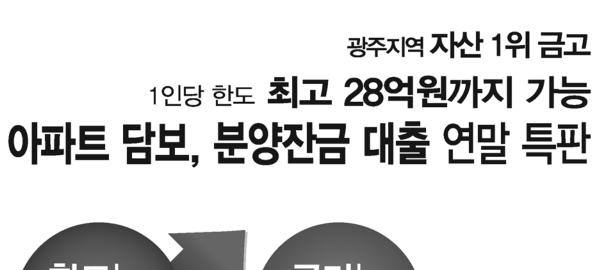
비선실세 권력암투 의혹 관련 '문고리 3인방' 등 사퇴 촉구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3일 이른 바 비선실세들을 둘러싼 권력 암투의혹과 관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대통령 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실에 굉장한 신 뢰를 표시했는데 어떻게 검찰이 권력 최고 핵심인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이 분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결과를 국민은 믿을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공세에 동참했다. 그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정윤회 보 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찌라 시 루머를 모아 사실인양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양새마을금고

